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후건

반값등록금 논란과 백년대계

반값등록금 논란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거리는 수만 명의 대학생과 청년, 그리고 시민들이 나서서 반값등록금 시위를 벌였으며 이들은 매주 금요일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날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정부 보조를 통해 세원을 마련해야 하고 이는 국민의 세금을 올리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런데 대학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국민 모두가 반값등록금을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이 논란이 된 것은 현 정부의 선거공약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이야기였다고 말해 논란에 모호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등록금 실태는 어떠한가. 2010년 4년제 일반대학 기준 연평균 등록금 국립 444만원, 사립 754만원이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등록금 부담률이 소득 대비 1/10인 반면, 한국은 학생 대부분이 국민소득의 1/3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어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보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부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득 하위 10% 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은 97.9%에 달한다.

이렇게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들(사립대학)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을 재구성(책정된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하거나 정부예산을 늘리는(세금을 더 거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모두 쉬운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반값등록금 문제가 부각된 이유를 다른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점점 높아져 가는 청년실업률 그리고 빈부격차 등으로 사회적 불만들이 다른 식으로 표출된 것은 아닐까?

과거 대학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출세를 좌지우지하는 관문과 같았다. 대학진학 여부가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이제 80%가 넘었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 가는 것이 이제 거의 보통 또는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졸업생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데 그리고 좋은 직업을 얻는데 프리미엄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두고 한편에서는 고등(대학) 교육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의 반영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높은 교육열은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높은 교육열이란 개인의 능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하자는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이고 의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높은 교육열이 대학이라는 간판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또는 대학이라도 나와야'와 같은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반값등록금을 야기시킨 근본적인 문제는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된다 하여도 결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선거철에 대비해서인지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고 대동소이한 안을 내놓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진 핀란드의 성공 비결을 교육개혁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핀란드 교육개혁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교육개혁은 40년간 이루어졌으며, 수차례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교육개혁을 이끈 수장은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1972~1992년) 교육개혁을 이끌었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반값등록금으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처방을 시급하게 내리기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보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백년을 내다보며 만들어야 한다. 〈경남대 정외과 부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U대회 수영장 입지, 정치적 개입 안 된다

2015 하계U대회 수영장 유치경쟁이 광주 광산구와 남구 간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산구는 전임 시장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남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역 정치권까지 유치경쟁에 가세해 수영장 건립사업이 자칫 정치논리에 휘둘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산구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수완수영장 원안 건립을 광주시에 촉구하고 나선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수영장 입지를 5개 구청 간 균형배치, 교통 접근성, 메인스타디움 및 선수촌과 연계성, 건립비 최소화, 사후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운태 시장도 "수영장 부지는 광산구에 국한하지 않고, 5개 구 전역을 대상으로 알아보겠다"고 밝혀 원점 회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임 시장 때 수영장 건립사업이 광산구 수완지구로 결정돼 이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계약까지 마친 상태라는 점에서 그 후유증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소모적인 국론분열과 정치적 갈등, 국력 낭비를 초래한 '세종시'의 재판이 광주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우려에서다.

물론 수영장 입지가 강 시장의 주장대로 어느 지역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을 한다면 광산구 주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임자가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하거나 강 시장의 국회의원 출신지가 남구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시민이면 모두가 공감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최상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도 주민을 선동하거나 정치논리를 개입시킨다면 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정치권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한다.

반복되는 '혈세 도둑질' 이대로 둘 건가

나랏돈을 제 호주머니 돈처럼 빼먹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또다시 적발됐다. 서류 조작 등의 수법으로 수 천만 원의 국가 보조금을 빼돌리고, 재해 복구비를 부당 수급하거나 지급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사법조치된 것이다. 이들이 과연 국록(國祿)을 먹는 공복으로서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남·경남·부산 등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로부터 지원받은 8800만 원 가운데 3200만 원을 횡령한 순천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하지도 않은 공연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공연 시간을 부풀려 돈을 횡령해 회식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함평군청 공무원 1명은 재해 보상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자신의 비닐하우스 352㎡가 파손됐다며 150만 원을 받았다가 들통이 났다. 또 다른 4명은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7개 농가에 17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부당 지급했다.

국가 예산 횡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서류 위조, 금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예산을 쌈짓돈처럼 쉽게 빼냈다. 그들에게 국가 예산은 눈먼 돈이었다.

예산 횡령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직자의 경우 비리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관행도 큰 문제다.

혈세 횡령은 죄질이 가장 나쁜 비리 중 하나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처럼 국가 예산이 상시적으로 도둑질당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지자체의 국가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 '혈세 도둑'은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특별기고

6·25전쟁이 갖는 의미 되새겨볼 때다

안중현

6·25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1년이 흘렀다. 3년 1개월 동안의 치열한 전쟁은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었고,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종전된 지 58년이 흘렀다.

휴전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 현실 속에서 지역·계층·세대간 갈등으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쟁 등 국난을 체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국방의 의무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 가운데 6·25전쟁을 단순한 과거사로만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25전쟁 발발 연도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무려 36.9%나 됐다.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56.5%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8.7%, 40대가 23.0%를 차지하였다.

또한, 지난 2008년 6월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중·고교생 1016명을 대상으로 안보·안전의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6·25전쟁을 일으킨 국가를 모르는 학생은 40.3%나 되었고, 심지어 2%의 학생은 남한이 6·25전쟁을 일으켰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과 청소년들의 수준을 전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6·25전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6·25전쟁 61주년을 맞는 지금, 6·25전쟁이 과거의 역사에서나 찾을 수 있는 전쟁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았던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참전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직도 전쟁의 상흔과 고통을 가슴에 묻은 채 살고 계시는 참전국가유공자와 유가족, 호국용사가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휴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크고 작은 테러와 도발행위는 끊임없이 계속 되었고, 천안함 폭침 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거듭된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때 6·25전쟁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중요하다.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이야말로 온 국민의 힘과 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제나라의 명장 사마양저는 "세상이 아무리 평안해도 전쟁을 잊고 있으면 위태로움이 온다"는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는 말을 남겼다.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전쟁의 위협을 잊고 지내다 보면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국가의 안위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외교력과 함께 온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결집할 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용사의 '호국정신', '나라사랑 정신'을 온 국민이 가슴깊이 새겨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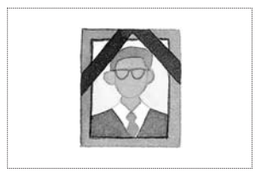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고, 민족의 번영도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6월이 가기 전에 우리 고장의 호국현충시설을 찾아 6·25전쟁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지방보훈청장〉

無等鼓

公人 자살



기원전 218년,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은 로마를 치기 위해 알프스산맥을 넘는다. 수군 중심의 카르타고군이 엄동설한의 알프스산맥을 넘는 것은 누가 봐도 자살행위였다. 로마군대와 마주치기도 전에 얼어 죽고 굶어 죽을 것이라는 걱정이 대단했다. 한니발은 그러나 4만6000명의 대군과 코끼리를 이끌고 죽음을 무릅쓴 원정을 감행, 마침내 로마의 북쪽 방어벽을 뚫고 로마 시내에 진주했다.

로마 1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두려운 외국인으로 묘사되는 한니발이었지만, 16년 후인 기원전 202년 북아프리카 자마평원 전투에서 젊은 로마 장군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에게 패배한 뒤 숨어 지내다 생을 스스로 마감한다. 로마인들에게 당할지도 모를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는 네로의 횡포를 보다 못해 관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결국 역모 혐의를 받고 증기탕에 스스로 갇히는 죽음을 택한다. "모든 인생의 고통에 저항해서 나는 항상 죽음의 피난처가 있다"고 말해온 스토아 철학자다운 최후다.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역 사회 공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악마의 덫에 걸렸다"는 유서를 남긴 임상규 순천대 총장은 전직 장관으로서 '함바집 비리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아왔지만,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수치를 피해갔다. 비리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김기훈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에게서는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뜻이 읽혀진다.

하지만, 공인의 자살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엄청나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10만명 당 자살인구가 25.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공직에 있을 때나 떠났을 때나 법적·도덕적으로 엄격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함은 물론, '죽음'까지도 판단의 대상임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jnews@kwangju.co.kr

의료 칼럼

털·땀·뱃살 여름철 3대 고민

이상혁

여름이 되면서 노출이 많아지자 털(毛)과 땀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 특히 짧은 소매의 옷을 입고 팔을 올렸을 때 드러나는 겨드랑이는 여자 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제모 부위 중에 하나이며, 겨드랑이에 땀이 많아 조금만 덥거나 긴장을 하면 옷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항상 겨드랑이가 축축한 다한증의 경우 더워지는 여름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사실 신체의 털은 체온의 조절 및 피부 보호 등의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당하는 실정이다.

털 같은 경우 굵기와 길이·깊이 등 그 간격이 제각기 달라 한 가지 레이저로는 모든 털을 완벽히 제거하기가 어려우며, 다양한 레이저로 시술해야 효과적으로 털을 제거할 수 있다. 제모 후에는 보습을 철저히 해주고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 손상을 줄이는 게 좋다. 또한 반영구 제모를 위해서는 한번만의 레이저 조사로 되지 않기 때문에 털의 생성주기에 맞춰 4~8주에 한 번씩 5회 이상 시술을 받으면 효과가 80~90%가량 높아진다.

일반인이 하루에 흘리는 땀의 양은 0.5~0.7리터 정도이지만 여름철이나 운동을 할 때는 10리터까지도 흘린다고 한다. 그러나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은 하나의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시술하는 겨드랑이 부위에 땀주사를 시술하면 땀 분비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을 차단하고 땀샘을 수축시키게 되므로, 땀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시술 시간은 10~15분 정도며 1주일 정도가 지나면 땀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효과는 약 6개월 정도이며 주로 겨드랑이, 손바닥, 발바닥 등의 다한증 치료에 많이 사용된다.

여름에는 뱃살로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 성형의 도움을 받아 뱃살을 빼는 방법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방법은 지방흡입술이다. 지방흡입 전 체성분 분석과 체형분석을 통해 지방흡입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장비만의 경우에는 뱃살이 많이 나왔더라도 지방흡입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흡입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투머슨트라는 마취액을 넣고 지방흡입을 한다. 수술 시간과 의사의 노동량을 줄이기 위한 파워를 이용한 지방흡입(PAL)도 고안됐다. 초음파를 이용해 지방을 녹이고 녹은 지방을 뽑아내는 방식도 있다.

최근에는 물분사를 이용해 지방을 흡입하는 방식으로까지 발전했다. 실제로 지방흡입의 가장 두려운 부분은 사망사고이다. 미국에서 지방흡입과 관련한 사망사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전신마취시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부분마취로 수술을 하기 위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워터젯 지방흡입은 부분마취로 지방흡입을 위해 고안된 방법 중 한가지이다. 이 시술은 수술 도중 출혈 위험이 적고, 피부의 굴곡이나 멍을 줄일 수 있다. 수술 후 하루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회복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다.

뱃살이 처졌다면 복부성형술이 효과적이다. 처진 뱃살을 절제해내는 방법이다. 복부성형술은 살을 제거한 뒤 복부를 박리를 해 다시 덮어주는데 최근에는 지방흡입을 병행, 박리를 거의 하지 않는 수술법이 많이 사용되면서 회복기간도 짧아졌다. 확실하게 늘어진 뱃살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복부에 흉터가 남는 단점도 있다.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출산 등으로 복부의 피부만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튼살이 보기 싫다면 동시 제거가 가능하다.

〈SM美성형외과 원장〉

야생동물 농작물 습격 피해 막대…보호 방안 마련해야

부모님은 무안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면서 생활하고 계신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큰 손해를 봤다. 수확을 앞두고 떼로 몰려 내려온 멧돼지 때문이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내려와 밭을 갈아 엎고 고구마를 파먹어 공기총까지 들고 밤새 보초를 서기도 했지만 매일 나타나는 동물을 막기란 쉽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런데 가끔 환경단체들이 야생동물 포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그들에게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는지 묻고 싶다.

물론 아무 이유없이 야생동물을 잡아죽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야생동물을 잡아 팔아넘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포획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야생동물들을 잡는 것은 허용해줘야 한다.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는 이런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대책도 없이 동물을 못 잡게 막기만 한다.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눈물나는 심정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

농민들이 동물들의 습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또 야생동물에게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충분한 보상책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오새리·광주시 동구 서석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경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1	디자인	2200-536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조사부	2200-571	〈FA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